

현안과 과제

■ 창조경제, 미래 신산업 발굴·육성에 달려있다!



 **현대경제연구원**

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견해를 밝혀두며, 보고서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창조경제 활성화 필요성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 국가의 경제 발전과 성과 창출에 있어서 창조성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, 주요 선진국들도 창조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(창조경제)으로 전환을 위해 노력 - 한국의 경우 창조경제역량이 OECD 31개국 가운데 20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,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시급한 시점임 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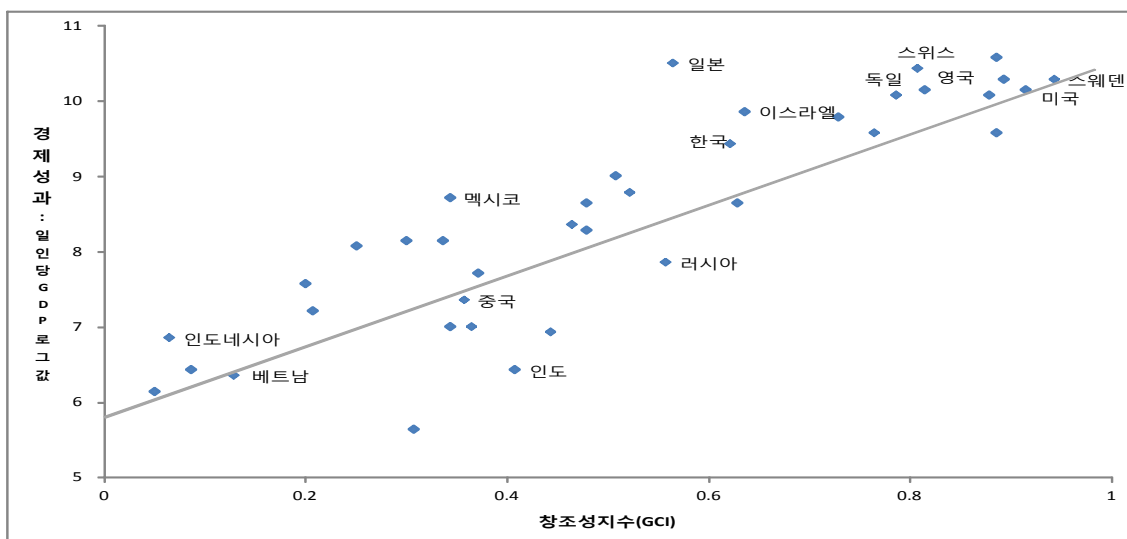
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하다	
창조경제 필요성 및 정책 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필요성) 대부분의 사람(98.6%)들이 창조경제의 필요성 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창조경제의 목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(74.6%) - (정책 기대효과) 향후 정부의 전략이 잘 추진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 69.4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창조경제 관련 정책들의 효과 크다는 의견(41.6%), 적다는 의견(25.0%)
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성장동력 창출)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 및 육성(33.3%)이 시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산업 개척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으로는 과거 정책을 현 정부 전략에 맞게 재편(80.6%)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 · 가장 시급하고 효과가 큰 육성산업으로는 바이오, 의료 등 미래 유망 분야의 기술 개발(66.2%)라는 의견이 많음 - (벤처의 창조경제 주역화) 벤처 대상 공공 조달시장 창출 및 확대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안정 지원 강화(30.6%)가 가장 필요 ·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정책으로는 금융, 시장정보 등의 윈스톱 지원 강화(39.8%)가 우선되어야 함 - (창업생태계 조성) 청년 창업 지원 환경 개선(34.7%)이 시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창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투자중심으로 채도전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(69.4%)이 가장 많음 - (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) 공공 교육부문의 전반적 개혁(54.2%)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에 창의적 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유입 인재에 대한 창의 활동 지원 강화(34.7%) 노력이 우선 필요함
창조경제 선결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선결 과제)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전략 마련(30.6%)이 시급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책 컨트롤 타워 조기 구축(25.0%), 창조경제 국민 공감(16.7%) 순서 - (우선 추진 전략) 신사업,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전략 33.3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벤처와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(23.6%), 창업생태계 조성(22.2%) 순서

시사점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시장 개척이 필요함 ②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의 공공 조달 시장 창출 및 확대를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이 될 이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함 ③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모색되어야 함 	

1. 창조경제의 활성화 필요성

- 한 국가의 경제 발전과 성과 창출에 있어서 창조성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짐
 - Martin Prosperity Institute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창조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 성과(1인당 GDP)도 높게 나타난다고 함
 - 미국, 스웨덴, 영국 등 글로벌창조성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1인당 GDP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
-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임
 - 미국은 2009년부터 '국가혁신전략'을 통해 국민의 창조성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창출에 노력하고 있고, 유럽도 '유럽 2020 전략'을 통해 창의적 재능 기반 산업 육성을 모색하고 있음
 - 최근 한국도 기존의 단순 시장 확대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

<경제 성과와 창조성의 관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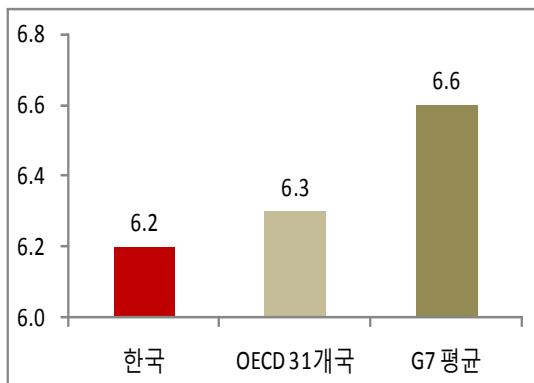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Martin Prosperity Institute, Creativity and Prosperity: The Global Creativity Index(2011.1)

○ 미흡한 한국의 창조경제역량

- 한국의 경우 창조경제역량 지수¹⁾는 OECD 31개국 가운데 20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
 -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6.2점으로 OECD 31개국 평균(6.3점)보다 낮으며, G7평균인 6.6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
- 세부 부문별로 살펴보면,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ICT 자본을 제외한 4개 자본 모두 G7보다 열세로 나타남
 - 한국의 ICT 자본은 8.6으로 G7 평균 7.0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, 인적자본, 혁신자본, 문화자본, 사회적 자본이 G7 평균에 못 미침에 따른 결과 OECD 31개국 평균보다 격차가 심해 진 것으로 평가됨
- 따라서 한국의 창조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시급한 시점임
 - 이를 위해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해 창조경제 정책 관련 주요 현황과 향후 과제 도출에 대해 살펴봄

<한국, G7, OECD 창조경제역량지수 비교>
(10점 만점 기준)



< 한국과 G7의 창조경제역량지수
세부 부문별 결과 (10점 만점 기준) >

구분	한국	G7 평균
인적자본	6.5	7.4
혁신자본	5.4	5.5
ICT 자본	8.6	7.0
문화자본	3.7	5.3
사회적 자본	6.7	7.6
창조경제역량지수	6.2	6.6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한국의 창조경제역량 지수 개발과 평가(2013.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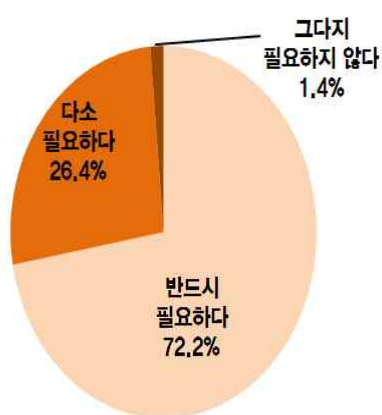
1) 창조경제역량지수란,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요소(인적자본, 혁신자본, ICT자본, 문화자본, 사회적 자본) 들의 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수화한 것으로 각 요소별 개별역량지수의 종합지수이다.

2. 창조경제의 정책 효과 및 선결 과제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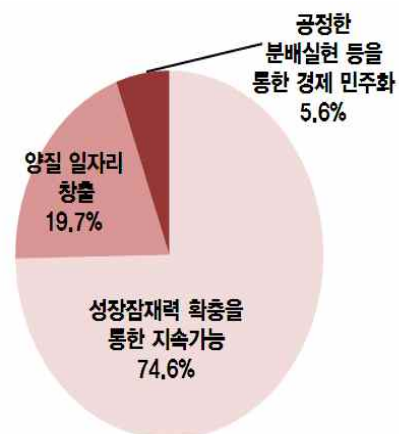
○ 창조경제 필요성 및 목표

- 창조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, 창조경제의 최종 목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성장으로 인식
 -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창조경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비중이 98.6% 차지
 - ‘반드시 필요하다’, ‘다소 필요하다’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72.2%, 26.4% 차지
 - 반면, ‘그다지 필요하지 않다’라고 응답 전문가는 불과 1.4% 차지
- 창조경제의 최종목표는 ‘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’이라고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음
 - ‘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’ 74.6%, ‘양질의 일자리 창출’ 19.7%, ‘공정한 분배 실현 등을 통한 경제 민주화’ 5.6% 순으로 비중이 높음

<창조경제 필요성>



<창조경제의 목표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9월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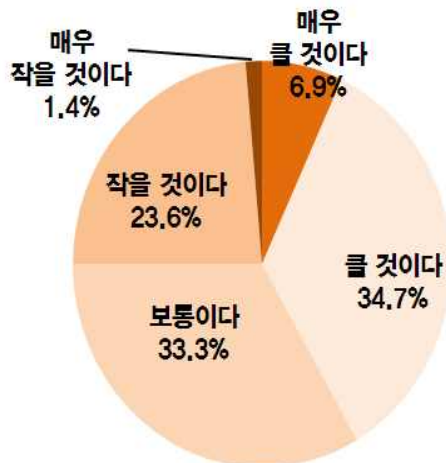
2) ‘창조경제 활성화 과제 조사’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문가 72명을 대상으로 2013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일주일 간 조사하였다. 이메일조사로 응답률은 60%이다.

○ 창조경제 관련 정책의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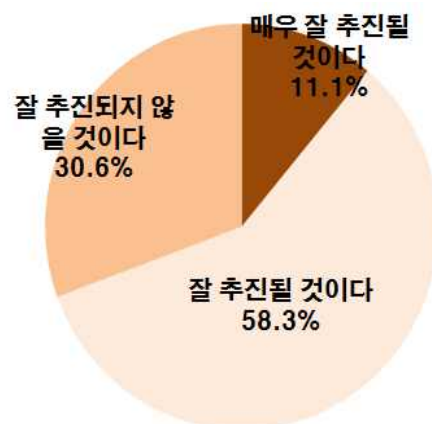
-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정책들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1.6%를 차지
 - ‘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정책들의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’라는 질문에 대해 ‘클 것이다’, ‘매우 클 것이다’의 비중이 각각 34.7%, 6.9%를 차지
 - ‘보통이다’라고 응답한 비중은 33.3%로 높은 비중 차지
 - 반면, ‘작을 것이다’, ‘매우 작을 것이다’라는 비중이 각각 23.6%, 1.4% 차지

- 향후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이 잘 추진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
 - ‘향후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이 잘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’라는 질문에 대해 ‘그렇다’, 매우 그렇다’의 비중이 각각 58.3%, 11.1%를 차지해, 향후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이 잘 추진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69.4%를 기록함
 - 반면, ‘그렇지 않다’가 30.6%를 차지

<창조경제 관련 정책의 효과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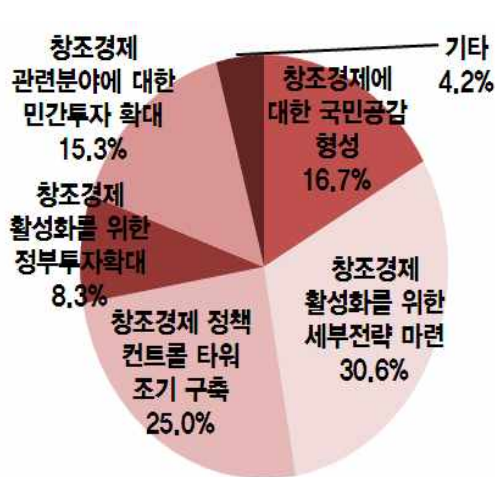
<향후 창조경제 전략 추진 평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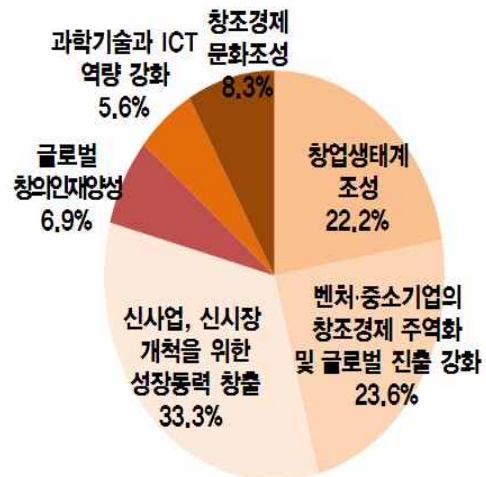
○ 창조경제를 위한 선결 과제

- 창조경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‘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전략 마련’ 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0.6%로 가장 높음
 - ‘창조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 조기 구축’ 25.0%, ‘창조경제에 대한 국민공감 형성’ 16.7% 등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 차지
 - 그 외 ‘창조경제 관련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’ 15.3%, ‘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투자 확대’ 8.3%, ‘기타’ 4.2%를 차지
-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전략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전략은 ‘신사업·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 창출 동력’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3.3%임
 - ‘벤처·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’ 23.6%, ‘창업생태계 조성’ 22.2%로 높은 비중 차지
 - 그 외 ‘창조경제 문화조성’ 8.3%, ‘글로벌 창의적 인재 양성’ 6.9%, ‘과학기술과 ICT 역량 강화’ 5.6% 차지

<창조경제 극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>



<우선 추진되어야 할 창조경제 전략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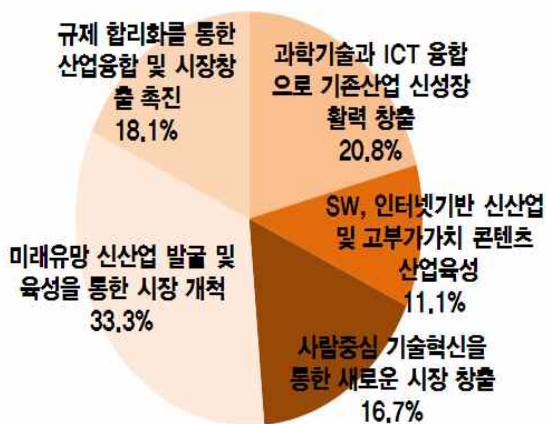
3.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

1) 신사업·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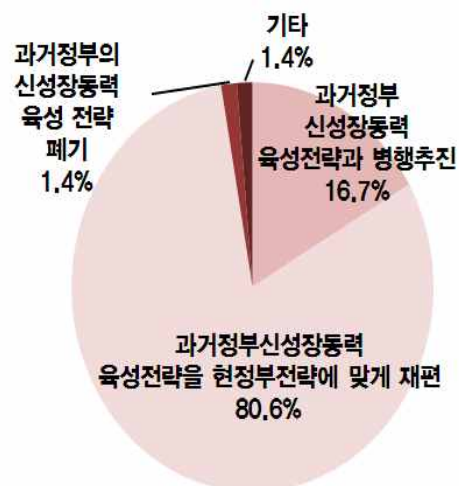
○ 신사업·신시장의 정책과제와 방향

- 정부의 신사업·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시장 개척이라는 대답이 우세
 - ‘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·육성을 통한 신시장 개척’ 33.8%, ‘과학기술과 ICT 융합으로 기존산업 신성장동력 창출’ 20.8%, ‘규제합리화를 통한 산업융합 및 시장창출 촉진’ 18.1%, ‘사람중심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’ 16.7%, ‘SW·인터넷기반 신산업 및 고부가 콘텐츠산업 육성’ 11.1% 순으로 높음
-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·신시장 개척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‘과거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을 현 정부 전략에 맞게 수정·재편’이라는 응답 비중이 80.6%로 압도적
 - 그 외 ‘신성장동력 육성 전략과 병행 추진’ 16.7%, ‘과거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 폐기’ 1.4%차지

< 신사업·신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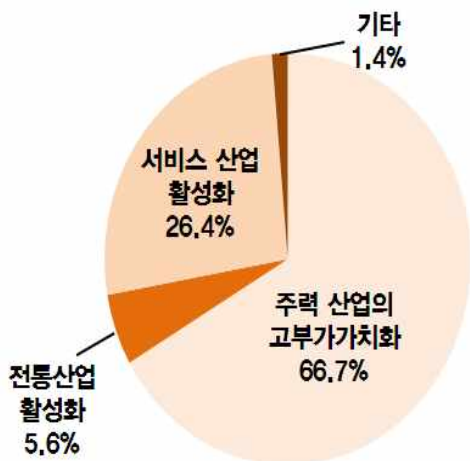
< 신사업·신시장 개척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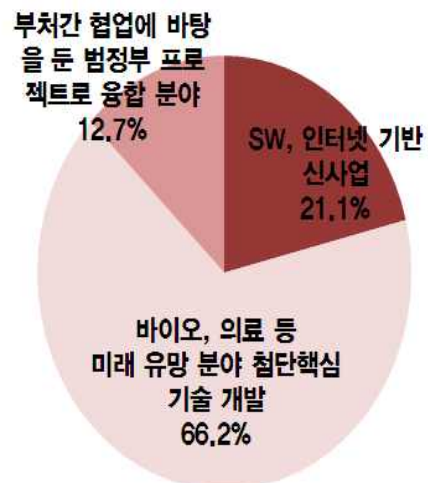
○ 기존산업 신성장 활력 창출과 육성 산업

- 기존산업 신성장활력 창출을 위한 정책 중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
 - ‘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’ 66.7%, ‘서비스 산업 활성화’ 26.4%, 전통산업의 활성화 5.6% 순으로 차지
- 신산업·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정부가 육성코자 하는 산업들 중 바이오·의료, 나노·소자소재, 에너지·환경 등 미래 유망분야 첨단 핵심기술 개발이 가장 시급하고 효과가 큰 산업으로 응답
 - ‘바이오·의료, 나노·소자소재, 에너지·환경 등 미래 유망분야 첨단 핵심기술 개발’ 66.2%, ‘SW·인터넷 기반 신산업(빅데이터, 클라우드, 사물인터넷 등)’ 21.1%, ‘부처 간 협업에 바탕을 둔 범정부 프로젝트(일명 비타민 프로젝트)로 융합분야 12.7% 순으로 차지

< 기존산업 신성장 활력을 위한 과제 >



< 가장 시급하고 효과가 큰 육성 산업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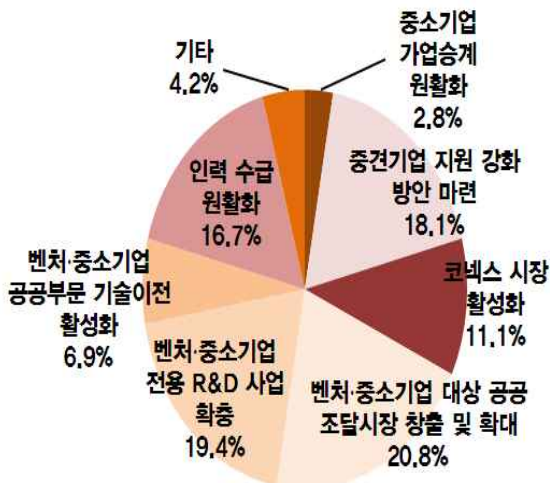


2) 벤처·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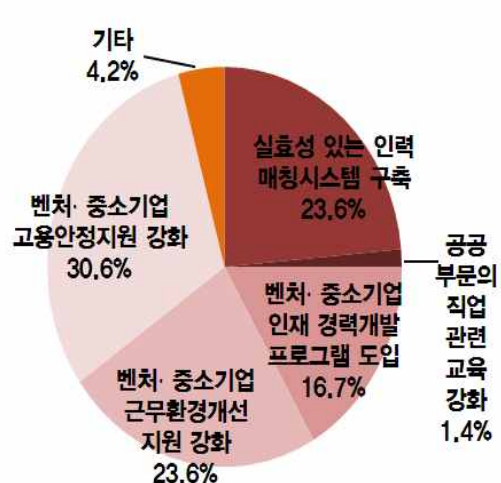
○ 벤처·중소기업의 성장과 인력난 해소

- 벤처·중소기업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'벤처·중소기업 대상 공공조달시장 창출 및 확대'이라고 응답한 비중 20.8%로 가장 높음
 - '벤처·중소기업 전용 R&D 사업 확충' 19.4%, '중견기업 지원 강화 방안 마련' 18.1%, '인력수급 원활화' 16.7% 등의 다수 의견 존재
 - 그 외 '코넥스 시장 활성화' 11.1%, '벤처·중소기업 대상 공공부문 기술이전 활성화' 6.9%, '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' 2.8% 차지
- 벤처·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은 '벤처·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 강화'라는 응답 비중 30.6%로 가장 높음
 - '실효성 있는 인력 매칭시스템 구축', '벤처·중소기업 근무 환경 개선 지원 강화'가 각각 23.6%씩 차지하며 두 번째 높은 비중임
 - 그 외 '벤처·중소기업 인재 경력개발 프로그램 도입' 16.7%, '공공부문의 직업 관련 교육 강화' 1.4% 차지

< 벤처·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위한 정책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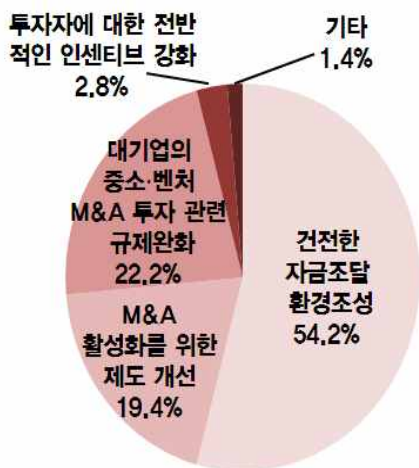
<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과제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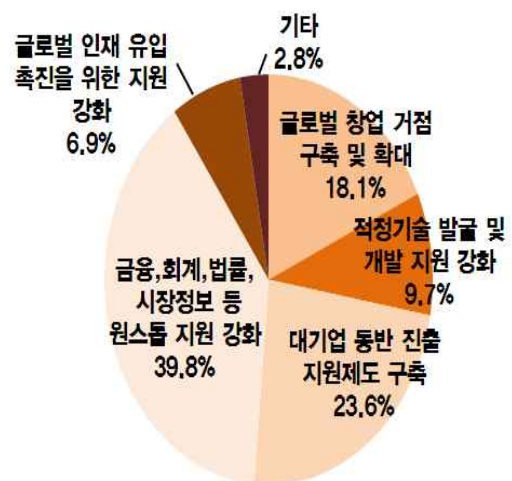
○ 벤처·중소기업의 자금시장 활성화와 지원 정책

- 벤처·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회수시장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 중 정책자금과 시중금융기관과의 중소·벤처 금융지원연계 강화 등 건전한 자금조달 환경 조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
 - ‘정책자금과 시중금융기관과의 중소·벤처 금융지원연계 강화 등 건전한 자금조달 환경 조성’ 54.2%, ‘대기업의 중소·벤처 M&A 투자 관련 규제완화’ 22.2%, ‘M&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’ 19.4% 순으로 가장 높음
 - 그 외 ‘투자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센티브 강화’ 2.6%, ‘기타’ 1.4% 차지
- 벤처·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과제로 금융·회계·법률·시장정보 등 비즈니스 서비스 원스톱 지원 강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
 - ‘금융·회계·법률·시장정보 등 비즈니스 서비스 원스톱 지원 강화’ 39.8%, ‘대기업 동반 진출 지원 제도 구축’ 23.6%, ‘글로벌 창업 거점 구축 및 확대’ 18.1% 순으로 가장 높음
 - 그 외 ‘적정기술 발굴 및 개발 지원 강화’ 9.7%, ‘글로벌 인재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’ 6.9%, ‘기타’ 2.8% 차지

< 벤처·중소기업의 자금시장 활성화 >



< 벤처·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정책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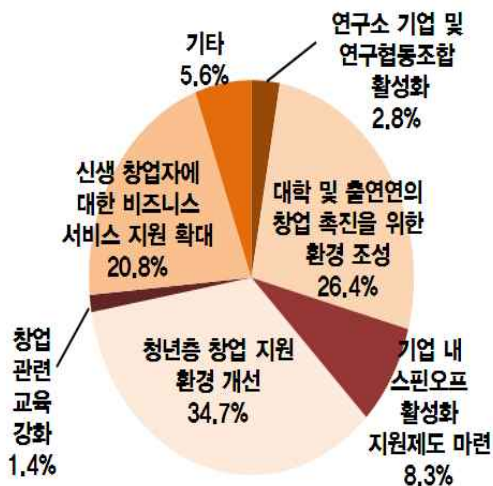


3) 창업 생태계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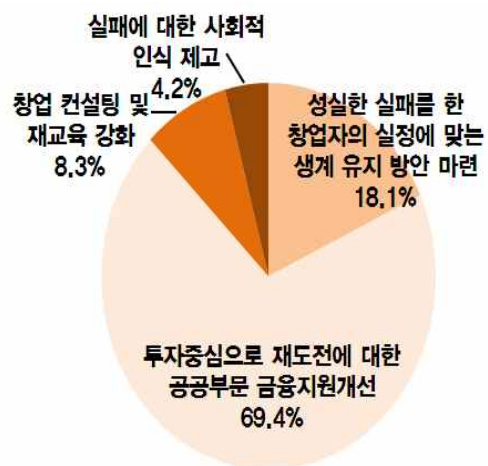
○ 창업 여건 조성 및 창업 안전망 구축

- 손쉬운 창조 여건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‘청년 창업 지원 환경 개선’이라는 응답 비중이 34.7%로 가장 높음
 - ‘대학 및 출연연의 창업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’ 26.4%, ‘신생 창업자에 대한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확대’ 20.8%로 다음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
 - 그 외 ‘기업 내 스핀오프 활성화 지원제도 마련’ 8.3%, ‘연구소기업 및 연구협동조합 활성화’ 2.8%, ‘창업 관련 교육 강화’ 1.4%차지
-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에서는 ‘투자 중심으로 재도전에 대한 공공부문의 금융지원 방식 개선’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9.4%로 가장 우세
 - 그 외 ‘성실한 실패를 한 창업자의 실정에 맞는 생계유지 방안 마련’ 18.1%, 창업 컨설팅 및 재교육 강화 8.3%, ‘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’ 4.2% 차지

< 창업 여건 조성을 위한 과제 >



< 창업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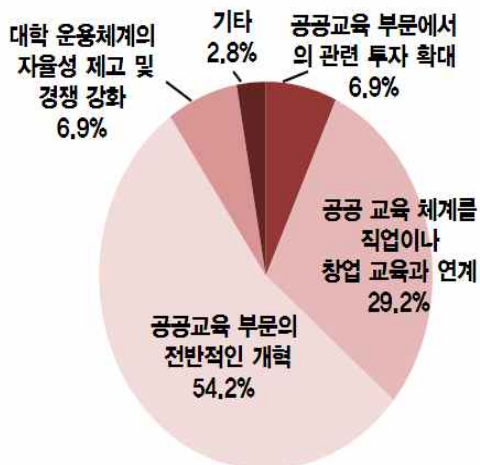


4)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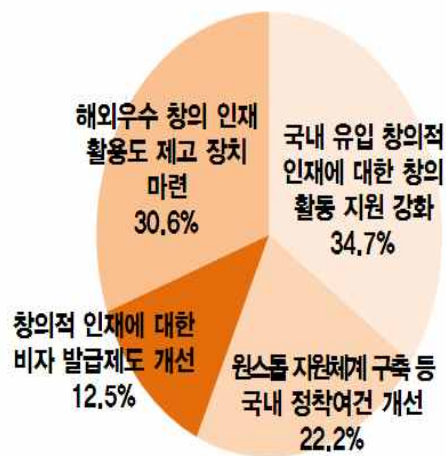
○ 창의적 인재 육성과 인재의 유입 촉진

-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‘공공 교육 부문의 전반적인 개혁’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4.2%로 압도적으로 높음
- 그 외 ‘공공 교육 체계를 직업이나 창업 교육과 연계’ 29.2%, ‘대학 운영체계의 자율성 제고 및 경쟁 강화’와 ‘공공 교육 부문에서의 관련 투자 확대’가 각각 6.9% 씩 차지
- 창의적 인재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‘국내 유입 창의적 인재에 대한 창의활동 지원 강화’라고 응답한 비중이 34.7%로 가장 높음
- 그 외 ‘해외 우수 창의 인재 활용도 제고 장치 마련’ 30.6%, ‘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등 국내 정착여건 개선’ 22.2%, ‘창의적 인재에 대한 비자발급제도 개선’ 12.5% 차지

< 창의적 인재 육성 과제 >



< 국내 창의적 인재 유입 촉진 과제 >



4. 시사점

- 첫째,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시장 개척이 필요함
 - 현재 정부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미래 유망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임
 - 한편, 기존 산업의 신성장 활력 창출을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함

- 둘째,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의 공공 조달 시장 창출 및 확대를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이 될 이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함
 - 벤처 및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 조달 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하는 것임
 - 또한, 이들을 위한 전용 R&D 사업을 확충하고 중견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

- 셋째,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모색되어야 함
 - 창조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적 공감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
 - 설문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의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대응이 필요함

이부형 수석연구위원(leebuh@hri.co.kr, 02-2072-6306)

정민 선임연구위원(chungm@hri.co.kr, 02-2072-6220)

장후석 연구위원(chahus@hri.co.kr, 02-2072-6234)

< 별첨 : 응답자 특성표 >

	사례수	%
■ 전 체 ■	(72)	100.0
□ 소 속 □		
교 수	(4)	5.6
공 무 원	(22)	30.6
연 구 원	(27)	37.5
협 / 단체	(12)	16.7
기 타	(7)	9.7
□ 연 령 □		
29 세 이 하	(2)	2.9
30 - 39 세	(8)	11.4
40 - 49 세	(42)	60.0
50 - 59 세	(16)	22.9
60 세 이 상	(2)	2.9
□ 성 별 □		
남 자	(66)	93.0
여 자	(5)	7.0